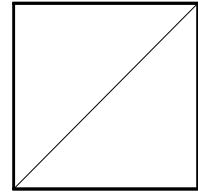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58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9. 21. (제 16 차)

의  
결  
사  
항

퍼시픽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전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9. 21.

## 1. 의결주문

퍼시픽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퍼시픽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투자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및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투자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퍼시픽자산운용(주)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 행위

☐ 퍼시픽자산운용(주)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2.2.17.) 심의필

## < 별지 >

퍼시픽자산운용(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퍼시픽자산운용(주) :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투자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및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 행위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1호·제5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22] 터.

### 2. 조치사유

####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퍼시픽자산운용(주)(이하, “회사”)은 ‘XXXXXX(설정일)부터 현재까지 운용중인 퍼시픽제○호전문사모△△△△△△△△△△(이하, “○호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 ‘XXX월 투자자인 (주)○○○○○으로부터 ☆☆☆ ☆☆☆☆ ☆☆☆☆ ☆☆☆ 시설(주)▲▲▲▲▲▲▲ 운영) 내 ★★시설의 장기임차 및 운영을 위한 펀드 설정 제안을 받은 후,
  - 펀드 설정 과정에서 펀드 수수료, □□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사 선정, 임대차 계약 조건 등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호 펀드 투자제안서, 정관 (집합투자규약)을 작성한 후 ‘XXXXXX ○호 펀드를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 펀드 설정 이후 운용 단계에서도 (주)○○○○○이 ‘XX년중 ☆☆☆ ☆☆☆ ☆☆☆☆ 계약과 자문사 계약 체결을 주도하도록 하였고, 임차인(○호 펀드)의 권한인 □□ □□ 변경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 ‘XX.X월 □□ 완공 이후에도 (주)○○○○○의 요청으로 ○호 펀드와 (주)○○○○○이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이 직접 □□을 운영하는 등 ○호 펀드를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회사는 퍼시픽전문투자형☆☆☆☆☆☆☆☆제○호 펀드와 관련하여 ★★★ ★★·△△△△△(각 ○.○○억원, 총 ▲▲억원, ‘XX.XX.XX. 회수) 및 □□□ (▽▽억원, ‘XX.X.XX. 회수)에 총 ◆회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 ④ <생략>

□ 舊 「자본시장법」(2020.5.19. 법률 제 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 4. <생략>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 ~ 9.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만원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③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삭 제 <2004. 3. 5.>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주의적 경고

제☆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 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839